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최근 통일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학교 통일 교육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에는 우리나라 초중고 청소년들의 55.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열 명에 다섯 명 꼴로, 전체의 절반 정도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할 대상인 북한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대략 60%가 전쟁·군사·독재 등 과거 남북 대결 구조 속의 이미지를 연상했다.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43.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비중도 35.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물론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그렇듯이 이러한 수치들은 그해의 남북 관계 상황 등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에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우호

학교·부모·청소년이 함께하는 통일 교육

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다. 그러나 평생 통일 문제를 연구해 온 필자로서는 청소년들의 통일 의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초중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통일 미래 시대를 열어나가는 세대라고 볼 때 청소년들에게 통일 문제에 대한 희망적인 사고를 불어넣어 주어야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몫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80%에 육박한다는 것은 국·영·수 문제 풀이와 입시에 바쁜 우리 청소년들이 그나마 최소한 도덕이나 별도의 체계를 통해 통일 문제에 대해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매우 다형스러운 일이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계기를 통해 통일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통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가정교육도 중요하다. 아직 정서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모든 사안을 판단한다. 부모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얼마 전 만났던 지인은 어린 손주가 "통일을 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대요"라고 하기에 누구에게 들었냐

고 물었더니 엄마·아빠에게 들었다고 해서 좀 놀랐다고 했다. 산업화·민주화 이후 치열한 입시와 높은 취업률 속에서 처절한 경쟁을 경험한 젊은 부모 세대들은 통일이 자신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자녀 세대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쉽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들은 전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앞둔 자녀들의 인식에 그대로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 팀 구성 논란이나 최근 탈북자들도 동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통일 문제가 더 이상 당위가 아닌 개개인의 현실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도 다양한 체험 활동 제공 및 적절한 자료뿐만 아니라 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의식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래도 '통일'이라는 이미지가 통일비용(10.9%)이나 사회 갈등(10.6%)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보다는 평화와 화합(34.0%)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표출된 것은 그동안의 평화 유지 노력 덕분이라 할 수 있다. 당장의 통일이 어려운 현실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항구적인 평화 상태를 구축하고 점진적 통일을 추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며 핵 없는 평화 구조를 정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이지만 남북 관계에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면 북미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북 제재와는 별개로 우리 국민들의 개별 관광이 실현된다면 남북 이질감을 극복하고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우선 이산가족들의 고향 방문이 허용되고 나아가 지난 금강산 관광처럼 민간 교류의 하나로서 남북 관광 교류가 실현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통일 교육의 장은 없을 것이다.

통일 이전의 동·서독도 동방정책 이후 동·서독 청소년 교류를 전개한 바 있다. 이전에 만난 독일 학자는 전범국가자 본단국이었던 동·서독이 자신들의 통일 염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지만, 교류를 통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통일은 남녀노소, 남북을 구분할 것 없이 전체 민족의 단합된 열정의 결집으로 나타나야 한다. 북한이 조속히 핵 포기 결단을 내리고 남북이 생명 공동체로서 공존공영하는 틀을 만들 때 통일은 가능할 것이다.

종교칼럼

지어야 받는 복(福)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박종빈 1891-1943)께서 서울고당에서 건축감역을 하는데, 하루는 여러 일꾼들이 일을 하다가 잠시 쉬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역지로는 잘살 수 없는 것이요, 반드시 무슨 우연한 음조(陰助)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종사께서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우연한 가운데 음조(陰助)와 음해(陰害)가 없지 아니하니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하나 부처님이나 조상이나 귀신이 맡아 놓고 주는 것이니 줄로 알지마는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각자의 심신(心身)을 작용한 결과로 과거에 자기가 지은 바를 현재에 받게 되고, 현재에 지은 바를 또한 미래에 받게 되는 것이요, 짓지 아니하고 받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아니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고난(苦難)을 역지로 면하려 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지어 놓은 죄복(罪福)은 다 편안히 받으면서 미래의 복락(福樂)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며, 같은 복을 짓는 중에도 국한(局限) 없는 공덕(功德)을 공중(公衆)에 심어서 어느 때 어느 곳에 서나 복록(福祿)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하나니라"라고 하였다.

사노라면 참으로 살맛 나게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다. 나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기분이 무척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운 일은 생각지도 않은 행운이나 복(福)이 내게 굴러 올 때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남에게 일어나면 한껏 부러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숨어서 도와주어 준 것인 결과가 온다고 한다.

반면 나에게 크고 작은 재앙이 오면 운

이 없었거나 재수가 없다고 하며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다가 펜스레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투덜 거린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든 피하려고만 한다. 다급하면 하나님이나 부처님 등 자기가 믿는 절대자에게 구원을 요청하거나 조상이나 귀신에게 도움을 청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내가 선악(善惡)간에 지은 업(業)과는 무관하게 다 숨어서 도와주거나 해(害)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인과(因果)의 이치를 모르기에 나오는 생각들이다.

원불교 대종경 인과품에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살므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살므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업인(業因)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緣)을 따라 지은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오"라고 하였다.

인과(因果)란 '내가 지은대로 받는

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이치다. 모든 것을 내 자의(姿態)와는 상관없이 모두 다 맡기고만 산다는 것은 스스로를 무력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도와준다는 것도 사실은 내가 공력(功力)을 들인 만큼 그 감응(感應)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기도의 결과도 마찬가지다. 내게 복(福)이 오면 밤심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더욱 감사하며 선업(善業)을 지어가야 한다. 어려움이나 죄업이 다가오면 원망하는 마음을 내기 이전에 '이제야 갚아야 할 빚을 갚는구나' 생각하고 닦게 받으며 새로 짓는 업(業)은 선하게 지어가야 한다. 또 같은 복(福)을 지을 때에도 한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복(福)을 짓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福)을 짓는 것이 좋다.

그래서 복(福)이란 짓고 보면 그 결과가 항상 없어지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고 했다. 다시 말해, 인과의 이치란 체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로 무언한 복문(福門)을 열어 가는 지름길을 알려 주는 것이다.

기고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를 위하여



문범수
광주시의회 사무처장

새해의 시작과 함께 진정한 지방 분권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반가운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중앙 정부 소관의 46개 법률과 400여 개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근거 법률인 '지방 이양 일괄법'이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무총리께서는 '권력 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치 경찰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국민과 더욱 가까이 함께하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경찰 조직이 되도록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30년의 낡은 '지방 자치법'의 개정도 머지않아 이뤄지리라 기대해 본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장점을 서로 인정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질서 체계로 나아

감으로써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세방화(Glocalization·세계화와 지방화의 합성어) 시대'이자 모든 분야의 융·복합이 혁신적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인 오늘날, 지역의 100년 반영을 위한 탄탄한 노드들을 쌓아가기 위한 지방 자치단체들 간의 무한 경쟁이 치열하다.

광주시는 이 같은 지자체들의 총성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인공 지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AI 허브 도시'로 우뚝 서고 우리의 후손들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광주형 일자리 글로벌 모터스 자동차 공장 구축을 비롯하여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코자 150만 시민들의 지혜와 의지를 한데 모아나가고 있다.

제8대 광주시의회는 금년을 아주 중요한 순간으로 인식하고 눈앞까지 다가와 있는 진정한 지방 분권 시대의 도래를 슬기롭게 맞이함은 물론 광주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올바르게 준비하기 위해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더 나은 대안 제시를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의회 사무처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 의회'라

는 의정 비전의 실현을 위해 기존의 업무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새로운 업무를 적극 발굴하는 등 유효한 의정 활동 지원 플랫폼의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원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과 미래 전략 도출을 위해 입법 정책 담당 직원들의 전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연구 과제 초안 검토 시점부터 입법·법률 고문을 활용함으로써 정책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예견되는 쟁점 사항이나 애매 모호함이 없도록 법률 해석을 선제적으로 검증해나갈 계획이다. 정책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한 심사와 추진 기간을 대폭 늘리고 용역심의위원회에 제안 의원이 직접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 용역의 내실을 더욱 충실하게 다져 나갈 것이다. 해의 교류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류 협력 대상 국가와 도시를 더욱 다변화하고 개인별 국외 방문 결과 보고서를 더욱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수익·행정자치·환경복지·산업건설·교육문화 등 5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 활동에 더욱 충실히 녹여낼 수

있도록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시민 여론 조사를 역대 광주시의회 중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 운영 체계를 더욱 선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대 의회부터 현재까지 본회의에서 발생한 특수한 사례와 이와 관련한 관련 법령 등을 상세하게 정리한 '의사 진행 실무 가이드 북'과 시각 장애인들의 알 권리와 시정 참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목·점자 의회 소식지를 올해부터 새롭게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자치 역량 강화와 의정 지원 업무 추진에 열정과 전문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직원 직무성과 평가 보상 제도'를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출범한 제8대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광주의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온 지 어느덧 1년 8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다. 150만 광주시민 대표 기관이자 충실한 대리자인 제8대 시의회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23명의 전체 의원들과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한 마음으로 지원하는 사무처 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함께 소통하고 지혜를 나눌수록 광주시민들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社說

코로나19 진정세 이젠 소비 진작 힘 모아야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공포가 퍼지면서 광주·전남 지역 음식점과 이·미용업 등 '골목 상권'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손님이 북적이던 음식점이나 술집은 물론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마저도 딱 끊겼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퇴원환자들이 늘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기피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방역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8명(13일 현재)이며, 이 가운데 7명은 퇴원했다. 나머지 21명은 격리 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두 안정적인다. 광주·전남 확진자인 16·18·22번 환자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한다. 광주·전남 지역 접촉 및 격리자는 각각 293명과 46명 등 339명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다음 주에 격리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처럼 코로나 19 확산세가 한풀 꺾임에 따라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역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도 다시 영업에 나섰고, 급감했던 매출도 점차 회복세에 접어드는 추세다. 중국산 부품 확보 차질로 공장 가동을 중단했던 기아차 광주공장과 금호타이어도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광주·전남 지자체 및 보건 당국도 소비 진작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음식점과 여행업, 이·미용업 등 영세 자영업이 빈사 직전에 몰리고 있다. 코로나19 공포가 광주·전남 지역의 경제 쇼크로 번지면 지역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신종 코로나는 전파력이 강한 편이지만 치사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전문가와 보건 당국의 진단인 만큼 맹목적인 공포는 금물(禁物)이다.

민간공원 토지 보상 왜 광주만 잠음 생기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시가 토지 보상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겨 잡음이 일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직접 보상 업무를 진행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외부에 위탁함에 따라 막대한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된 민간사업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그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9개 공원 10개 지구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약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수광·마북·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중앙(1·2지구)·중외 공원이다. 시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따라 토지 보상, 환경·교통 영향 평가 등을 거쳐 공원 일몰제 시한인 오는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민간공원 10개 사업자 모두 한국감정평가원과 토지 보상 업무에 대해 일괄 위탁 계약을 맺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만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떠안게 된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 35개 자치단체 대부분은 직접 보상 업무를 진행해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사업 초기 산하 종합건설본부와 도시공사에 보상 평가 업무를 맡아 줄 것을 요청했다가 두 기관이 인력을 늘려 이유로 거절해 포기했다고 한다. 또한 외부에 위탁을 한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시에서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업체들은 광주시의 무성의와 소극적인 행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네 명의 직원에게 10개 지구의 인허가 등 과중한 업무를 배정하고 일선 구청에도 각종 사무 담당조차 두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는 호소다.

광주시는 행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태스크포스 팀 구성 등을 통해 담당 인력을 늘리고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역사적으로 전염병 창궐은 사회나 문화를 바꾸고 심지어 한 국가나 문명을 멸절 시키기도 했다. 전염병 가운데 한 번 발생해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은 질병으로는 우선 독감을 꼽을 수 있다. 독감은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마다 수많은 희생자를 낳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등 역사마저 바꿨다. 독감은 문헌으로 볼 때 고대와 중세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최초의 독감 유행은 1387년 중세 유럽에서였다.

크림전쟁 독감은 전쟁 사에서도 유명하다. 크림전쟁은 1853~1856년 러시아와 오스만투르크·영국·프랑스·사르데냐 연합군이 크림반도·흑해를 둘러싸고 벌인 것인데, 양측 희생자가 전투보다는 독감으로 인해 더 많이 발생했다. 흑한과 독감은 전쟁에 뛰어들어 영국의 내각을 총사퇴하게 했다. 러시아 황제는 전쟁 중 독감에 걸려 죽었다. 결국 독감이 전쟁을 끝낸 사례가 됐다.

1918년 발병한 스페인 독감은 가장 악명 높은 최소 2000만 명에서 1억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진다. 스페인 독감은 제1차 세계대전 말미에 미국에서 발생해 연

합군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에 독일은 무조건 승리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스페인 독감은 독일군이라 해서 비껴 가지 않았다. 결국 전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뜻하지 않은 종전이 이뤄졌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 독감을 '무오년 독감'으로 불렀는데, 국내에서도 740만 명이 감염됐고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1957년에는 중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독감으로 전 세계에서 1년 만에 100만 명이 희생됐다. 1968년 홍콩독감도 80만 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전염병과 역사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에서만 사망자가 1000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사태 초기 초등 대처가 부족했음을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정했지만, 신종코로나 확산을 맨 처음 경고했던 의사 리원량이 숨지면서 중국인들의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중국 학자들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공개서한을 내놓기가 지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진핑 체제와 중국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채희송 사회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구(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